광주정신 외치면서 형평성 들어 보존 뒷짐

홍남순 변호사 자택 민주의집·사적지 지정 왜 무산됐나

광주시 마스터플랜 포함 불구
5·18기념사업회 논의서 반대
"사적지는 항쟁·운동 장소 중심"

광주시가 양심수 변론 등 인권활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자택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지정을 검토했었지만, 지정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애초 홍 변호사 자택을 '민주의 집'으로 건립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뒤 사적지 지정 방안이 검토됐었다.

5·18 기념재단과 지역 원로 민주인사들은 지난 2011년부터 아시아 문화전당 인근에 민주인사들의 사랑방 격인 '민주의 집' 건립을 논의해 다음해인 2012년 홍 변호사 자택을 민주의 집으로 건립해 줄 것을 광주시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시 2억9900여만원의 관련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재단과 원로들은 지난 2013년 3월 간담회 이후 홍 변호사 자택이 좁고 신축 수준의 리모델링이 필요해 당장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남구 양림동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 오월어머니집 부지에 민주의 집을 건립하기로 의결했다.

동구 궁동 15-1번지 고 홍변호사 자택은 119.008㎡ 규모의 단층 건물이며, 중심 상업지역이어서 당시 땅값이 3.3㎡당 500만~600만원 이상을 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오월어머니집은 165.289㎡의 2층 건물이며, 노후 정도가 덜 하다는 이유에서 오월어머니집 부지가 부각됐었다.

일각에서는 민주의 집은 민주인사들의 교류공간이지만, 재야 민주화 운동 변호사인 홍 변호사의 뜻을 기리는 사업이기도 한데 사업비나 효용성만으로 상징성이 떨어지는 오월 어머니집 자리로 옮기려는 것에 반발하기도 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원로들은 홍 변호사의 자택을 별도로 민주화운동 사적지로 조성할 것을 시에 건의했고, 시는 관련 사항 검토에 들어갔었다.

광주시는 당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5·18 마스터플랜 사업에 포함시켜 홍 변호사 자택의 사적지 지정이 가능한지를 따져봤지만, 형평성 등의 이유로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기념사업회에서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와 유적지는 80년 5월 당시 항쟁이나 민주화운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장소 등이 중심인데, 큰 틀에서 당시 민주화운동 인사들의 생가까지 사적지로 지정하기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힘들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변호사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의 변론과 양심수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맡는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꼽힌다. 5·18민중항쟁 때는 시민학살에 항의하는 뜻으로 행진을 펼치다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또 5·18명예회복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1985년 가톨릭 인권상, 1986년 대한변호사회 인권상,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고 2001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진 지 5년 만인 2006년 10월14일 별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0일 홍남순 변호사 자택 안방에서 넷째아들 성욱(62)씨가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있다. 성욱씨는 "돌아가신 아버님과 전국에서 다녀간 민주인사, 광주시민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집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형제들 모두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른 심정"이라고 말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더민주, 호남특위 설치 공식화

내일까지 구성 완료
위원장 추미애 대표

〈속보〉더불어민주당은 10일 호남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했다.

〈광주일보 10일자 3면〉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고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호남특위 위원장은 추미애 대표가 직접 맡으며 위원은 추후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특위 설치는 8·29 전당대회 당시 추 대표가 내건 공약이다. 추 대표는 전대에서 '호남 며느리론'을 내세워 당 대표에 당선되면 호남특위를 설치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한 달에 한 번씩은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민주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4·13 총선에서 호남이 보여준 민심을 빨리 복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오는 12일까지 호남 특위 위원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며 다음 주에는 특위 차원에서 호남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남 방문 자리에서 내년 호남 국고 예산 확보 공약을 제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과 군 공항 이전 등 지지 부진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되는 부분은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윤호중 정책위의장의 참여 여부다. 당의 예산과 정책을 맡고 있는 두 사람이 참여해야 호남 특위의 비중이 커지고 실질적인 내년 국고 예산 확보 및 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추 대표는 두 사람에게 호남 특위 수석 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 측 관계자는 "이번 호남 특위는 말 그대로 예산 및 정책 부분에서 호남의 소외를 시정해 가는 당의 중심 축이 될 것"이라며 "특히, 호남 특위에는 추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어 상당한 힘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동학농민혁명에서 5·18민중항쟁까지 사회운동 총정리

'민주장정 100년 …' 출간

1890년대 동학농민혁명을 기점으로 1990년까지 지역 사회운동을 부문별로 정리한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사' 연구총서가 출간됐다. 〈사진〉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지원해 결실을 맺은 상생의 성과물이다.

연구는 2012년부터 전남대 5·18연구소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사단법인 광주연구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획, 추진했다.

연구진으로는 각 부문 전문 연구자 15명(연구책임자 나간채 전남대 교수)이 참여했다. 모두 12권으로 구성된 총서는 총론(제1권)으로 시작해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항쟁(제2권),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제3권), 해방공간의 정치사회운동(제4권)에 이어 1960년대 이후의 민주화운동(제5권), 농민운동(제6권), 노동운동(제7권), 여성운동(제8권), 교육운동(제9권), 문화예술운동(제10권), 시민운동(제11권), 5·18민중항쟁(제12권)으로 나눠 담았다.

나간채 민주장정 100년사 간행위원장은 "총서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의 빛나는 역사를 되새기고 긍정적인 자존사관을 꽃피우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분야별 총서(총 12권) 500부와 시민용 도서(요약본 1권) 1500부를 이달 중 광주지역과 전국 국립도서관, 주요 공공도서관, 지자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경총회장이 미르 문제점 비판" 회의록 공개 교문위
"김영란법 준비 미비 해석 오락가락" 질타 정무위

국감현장

국회는 10일 정무위·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교문위**=이날 국감에서도 미르재단 설립과 기부금 모금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히는 차은택 영상감독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예위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문예위 위원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미르재단 모금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박 회장은 당시 "기가 막힌 일이 있다. 포스코가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데 30억원을 내겠다고 하더라"라며 "미르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전경련이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 450억~460억원을 내는 것으로 해서 이미 굴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민주 손혜원 의원은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 원장 공모 당시 1차 평가에서 2등, 2차 평가에서 3등을 했음에도 1등을 제치고 원장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급 공무원이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송 원장을 향해 "차 감독과 친하지 않느냐. 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차 감독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지 않느냐"고 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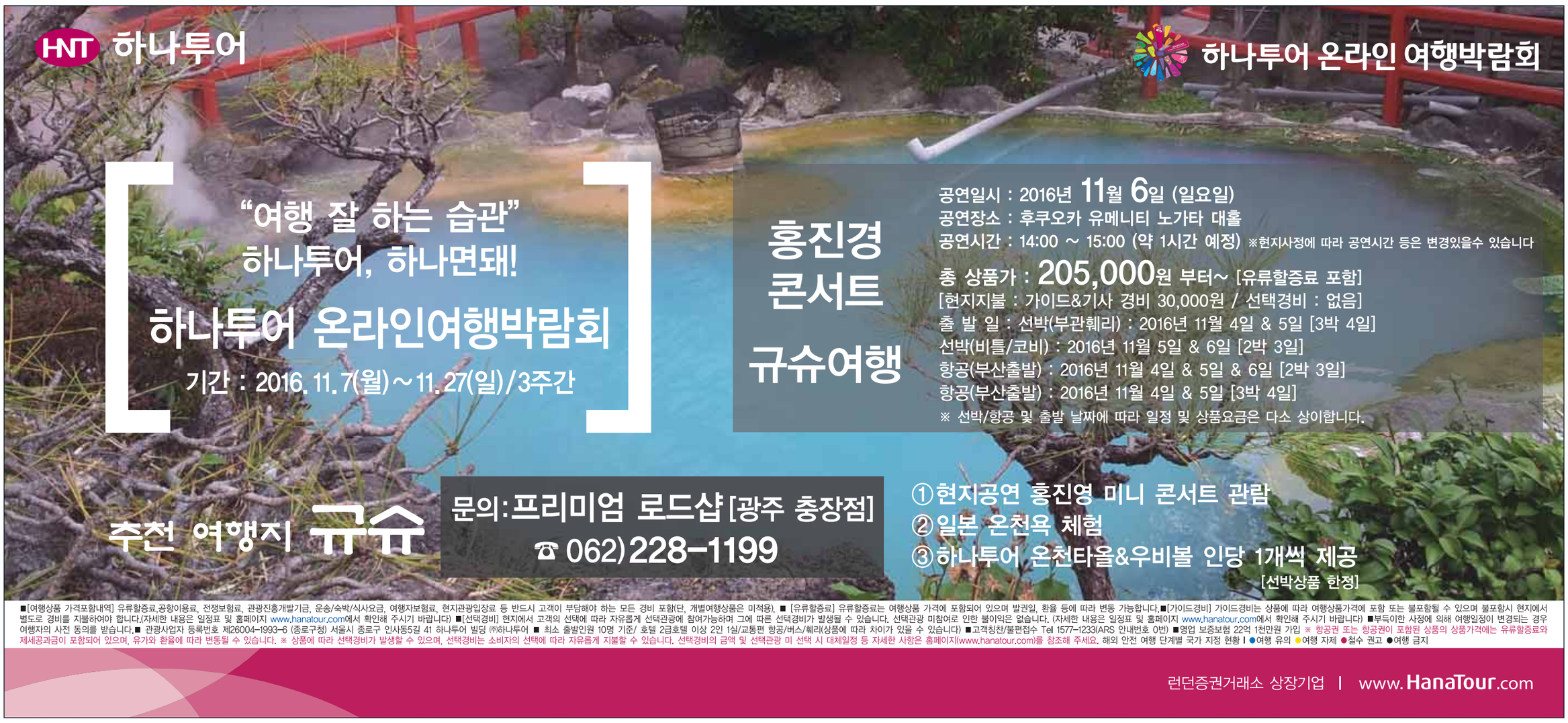
송 원장은 이에 대해 "한 때는 (차 감독과) 아주 친했다"면서도 "(차 감독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무위**=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이 시행된 지 2주를 맞았지만 일반 생활현장 곳곳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권익위가 내놓은 해설집·매뉴얼·보도참고자료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고 특정 집단에만 불리한 유권해석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처 장관과 다른 부처 장관끼리 서로 예산을 협의할 때는 가액 기준인 3만원 이내에서 음식 제공이 가능하지만, 직원들끼리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은 제멋대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재위**=이날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가 경영 비리로 검찰수사 중인 롯데그룹에 면세점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내놓은 데 대한 대가로 특혜를 받을 것이란 주장이다.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점유율을 면세점 특허 심사기준에 반영해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6월 면세점 신규신청 공고를 낼 때는 해당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